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도시 성장의 척도는 외연적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성에서 평가 된다. 전주시는 민선6기부터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 경쟁 속에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전주, 시민의 행복이 지속가능한 전주 만들기 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주다움'에 혁신을 더해 자립도시 전주시대를 열었고, 이는 곧 미래도시를 향한 전주의 경쟁력이 됐다. 그리고 이제 전주는 '특례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 가고자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 ‘특례시’로 경쟁력 강화

### ▲미래 전주 운영을 바꿀 특례시

정부는 최근 30년 만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주시가 주목하는 개정안은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과 권한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세수가 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에 용이해진다.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정부안대로면 지정 요건이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으로 제안되면서 그간 혜택을 받아온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 등 수도권과 경남권 4개 기초지자체만 지정대상에 포함돼 지역불균형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65만 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가 행정수요가 100만 명에 달하고 문화로 특화된 산업여건 등을 감안 할 때 광역시가 없는 전주는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전주는 또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 간의 간극을 좁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인 셈이다. 이에 전주시는 특례시 개정안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존폐 위협에서 벗어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전주의 운영을 바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 ▲‘전주다움’보존, 대한민국 혁신이 되다

전주시가 지켜온 정체성 '전주다움'은 도시의 경쟁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혁신 주역이 됐다.

대표적으로 오래된 숲터들을 보존, 창의적으로 재탄생시켜 연간 1000만 이상 관광객을 불러 모은 한옥마을과 전주형 도시재생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선미촌 내 폐 공가와 상매매업소를 인권·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방치된 폐공장을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 도로 한가운데를 명품 광장으로 조성한 첫마중길, 예술인이 모여 마을을 이룬 서학동 예술마을은 전주를 세계 속에 알렸다.

특히 팔복예술공장은 국내의 작가들의 작품전이 개최, 지난해 3월 개관한 이후 현재 4만2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전주다움을 지켜 지역혁신을 넘어 국가혁신을 불러일으킨 전주시의 도시재생은 또, 완산 권역의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문화심장과 덕진권역의 뮤지엄벨리 두 축으로 한층 성숙될 전망이다.

권역별로, 완산권역은 구도심 100만평에 전라감영복원, 객사 리뉴얼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 세계평화의 전당 조성, 풍남문 및 전주부성이 일부 복원하며 제2의 한옥마을 시대를 준비 중이다.

또한 전주 국제영화제의 위상에 걸 맞는 독립영화의 플랫폼 '전주독립영화의집'도 건립된다.

덕진권역은 전주지법·전주지검 부지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이 건립되고 법조삼현기념관 및 법조인 명예의 전당이 세워져 덕진 뮤지엄벨리를 완성한다.

이 부지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에 선정됐다. 외에 전주역세권과 전주 용머리 여의주 마을

특례시 지정되면 혜택·권한 주어져 세수 증가·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자체 도시계획 수립·개발 추진 가능 한옥마을·전주형 도시재생으로 대한민국 혁신 '전주다움' 보존 후세대 위한 창의교육 등도 벌여

이 대한민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래됨을 넘어 새로운 문화탄생을 준비 중이다.

### ▲다움세대를 위한 창의교육, 전주 미래를 밝히다

전주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청년을 위한 사업을 통해 탄탄한 전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주만의 아동·청소년 정책·사업에 '야호'라는 브랜드를 선정 미래교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야호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은 크게 생태 놀이터와 아이숲, 도서관, 야호학교가 있다.

전주는 지난해 야호프로젝트의 숲 놀이터 16개소를 조성하고, 생태 놀이터 2개소와 학교 놀이터 6개소를 개장 했으며 올해 4개소가 추가 된다.

특히 덕진 공원에 아동 친화 공간 조성, 공원 및 하천둔치에 어린이놀이터장 6개소 준비, 도심 속 물놀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실시 등 산과 물 어디서든 어린이가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11개 시립도서관에 조성을 목표로 도서관이 놀이터가 되는 '행복한 책 놀이터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전주시가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해 문을 연 프로그램인 '야호학교'는 12주 동안 다양한 학교 밖 창의 활동을 전개, 미래인재육성의 선진 모델이 됐다. 이외에 청년을 위한 사업인 '청년취업 프로젝트'를 추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다. 또 전국 최초 청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성공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공동창업 공간인 청년상상놀이터를 조성했으며, 도시 곳곳에 청년소통공간인 '비밀'을 만들어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며, 전주를 건인 할 씨앗을 뿌리고 있다.

### ▲자립도시 전주, 미래세대 더 큰 가능성 열다

전주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신산업과 에너지독립을 통한 자립도시 전주에서 찾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소산업이 있다. 전주는 탄소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상용화를 주도할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후 탄소산

업 육성의 법적 근거인 탄소소재법 제정에 이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인 전국의 탄소 관련 114개 업체가 의향을 밝힌 상태로 2020년까지 총 168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전주는 이 같은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 ICT(정보통신기술)를 융·복합한 신개념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드론산업을 육성하며 4차혁명 시대를 준비 중이다.

시는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IoT), VR·AR(가상증강현실)로 대표되는 ICT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교통정보, 방범, 재난, 시설물 관리 등 공공분야에 ICT기술을 도입해 스마트시티 구축, 도심 속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을 조성해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키워가기로 했다.

이밖에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독립(자립)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에너지 디자인 3040'인 에너지자립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율을 30%, 전력 자립율을 40%까지 달성해 에너지자립 청정도시 전주를 만들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이제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를 이끌어나가는 도시, 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라며 "전주 특례시 지정과 경제성장을 이끌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전주만의 고유의 색채와 감성을 잘 살려서 문화적으로 성숙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해 담대한 전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전주, 특례시로 지속가능 도시 경쟁력 높인다

### “행정수요 많은 대도시 특례시 지정 필요” 목소리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인정받는 '전주 특례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전주가 전북의 중추도시로 성장해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한 개 뼛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뼛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끼어있던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전북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전북은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1962년부터 정부주도

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이후에도 수도권과 경남권, 광역시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인구의 3.6%에 불과한 지역이 됐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 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7년 결산액 기준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1962년부터 정부주도

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에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전주시 청주시 등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추도시, 경기도 성남시 등 인구 100만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많은 대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김병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시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부시장장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진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도 최근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힘을 실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특례시 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인터뷰 김승수 시장

#### “특례시와 전주다움으로 미래를 열 것”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 년을 이어온 전주의 우수 한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고, 문화가 관광으로, 또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돼 시민들의 삶을 살찌우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다. 동시에,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3D프린팅산업, 사물인터넷(IoT)산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하는 일에도 집중했다. 김 시장은 "전주는 전주다움 때,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이다. 전

주만의 정체성을 찾는데 집중한 결과, 이제 전주는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문화도시, 대한민국의 도시재생과 혁신정책을 선도하는 리더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이제 전주가 시작하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따라하게 하는 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전주의 담대한 도전은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전북도나 타 시군의 뛴을 줄이지 않고 전주가 기존보다 두배 이상의 뛴을 받아내서 전북발전을 이끌 중추도시로 성장할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송효철 기자